

“한·중 경제협력, 전북이 앞장”

김관영 도지사, 중국 주광주 총영사와 면담... 대중교류·새만금 통한 협력 강조

김관영 도지사가 중국 주광주 총영사를 면담하고, 한중 최고위과정에서 한중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5일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장청강 총영사의 면담을 하고 도지사 취임 후 첫 국제교류 행사를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총영사의 면담 자리에서 “전라북도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과 가까운 지역이고, 주광주 총영사관은 호남지역에 위치한



유일한 외국공관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대중교류와 한중 협력 발전, 새만금을 통한 전북과의 경제협력을 강조했다.

장청강 총영사는 도지사 당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는데 이어 전북을 직접 예방해 친밀감을 표현하고, 전북이 대중국 교류의 우호 증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

하며 상호협력의 지속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 시간에서 김 도지사는 중국 언론사 관심사 항인 대중국 교류협력의 필요성과 한중 수교 30주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전라북도의 중국 자매우호지역과의 교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으며, 새만금 개발과 새로운 한중 협력, 한중 기업의 협력분야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김관영 도지사는 중국 언론사와 한중문화우호협

회 중국최고위과정 참가자들을 대상, ‘새만금시대와 새로운 한중협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도지사는 강연에서 전북 새만금이 갖고 있는 자원의 발전 가능성과 매력적인 투자 인프라에 대해 설명하고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동력이고, 한중우호의 새로운 30년을 열어 나갈 비전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새만금 등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강점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중국에 적극 홍보하고 실질적 교류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한·중 상생협력 다짐’ 중국 주광주 총영사관 장청강 총영사를 비롯한 주안평 영사, 장이판 영사주재관은 지난 15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을 예방해 지난 1일 공식 출범한 제12대 전북도의회를 축하하고, 양국의 상생협력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전북도의회 제공)

행안부, 경찰국 신설 발표... 경찰 내부서는 ‘불멘소리’

1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발표한 ‘경찰국 설치’ 등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놓고 경찰 내부에서 불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이 입장문을 발표하며 다독이기에 나섰지만, 경찰관들 사이에선 여전히 반발 기류가 높다.

이날 이 장관은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 제정 등이 담긴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달 2일 시행된다.

1991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분리·승격된 지 31년 만에 생기는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재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돼 경찰공무원 12명과 일반직 4명 등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된다. 이 가운데 인사지원과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제청 관련 사항 등을 총괄지원과는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보고와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요구 관련 보고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 장관은 “경찰국은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권한만 행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경찰청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통제·감찰하는 조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또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

으로 한층 경찰행정의 독자성을 확보했다”며 “행안부 장관의 지휘규칙은 경찰 수사나 감찰 등에 대한 사항은 제외해 경찰의 중립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장 동료들의 바람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향후 실행단계에서 국민과 경찰 동료들이 염려

입장문에는 일선 경찰관들이 수습개 댓글을 달았다 스스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항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경찰의 주요정책사항에 대해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지휘규칙안을 놓고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경찰관은 “14만 경찰관들이 아우성을 쳐도 눈 하나 깜짝 안 한 결과물”이라며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 경찰수장 격”이라고 썼다.

하지만 행안부가 경찰국 설치 등을 끝내 최종 확정하면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대외적인 집단행동은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반대 투쟁을 주도해왔던 직협은 릴레이 삭발 시위와 단식 투쟁 등을 모두 종료한 상태다. 직협은 이날 발표안에 대해 입장문을 내지 않을 계획이다.

직협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장 특별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향후 대응책을 내부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행안부 장관이 실질적인 경찰수장 격” 지휘규칙안 놓고 중립성 훼손 우려 글 올라와 대외적인 집단행동 지속되기 어려울 듯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도 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장관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과 관련, “책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성원을 경찰관으로 배치하고 업무범위도 장관의 법령상 권한 행사를 지원하는 것

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려하겠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놓고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반대주의 훼손”이라며 공개적으로 법제 의사를 표명하고 직에서 물러난 것을 감안하면 태도가 완전히 바뀐 셈이다.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서는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게시된 해당 경찰청

민주 “경찰국 신설, 30년전 얘기...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

“대체 마련에 당력 집중 법률적 대응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발표를 “대국민 심진포고”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경찰국 신설의 본질이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국민 저항도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상호 비대위원장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이 권력기관 장악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의도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행안부가 경찰국을 신설해서 경찰에 대한 인사 등 각종 장악력을 높이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경고하고자 한다. 무리수다”라며 “복선, 독주는 뒤편이 될 것이다.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현 장관이 보이는 무리한 국정운영 기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 당력을 집중해 반드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의 경찰제도 개선안은 수평적 분권이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며 대통령-장관-경찰로 이어지는 수직적 집권 체계로 회귀하려는 시도다.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다수 국민과 경찰의 지속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찰국 설치를 강행하는 것은 권력기관 장악만 큼은 법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서영교 단장과 의원들이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최종안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라며 “검사 동원제도 모자라 경찰 동원체까지 노리는 윤석열 정권의 퇴행적 시도는 머지않아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국 설치를 위해 총대 멘체 연일 운비어천가만 부르는 이상민 장관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겠다”며 “이 장관은 소름 명분만을 위해 허울 뿐인 감담화에 나서 오히려 경찰직협(전국경찰직장협의회) 대표들을 제도 개선안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심지어 경찰 내부의 합리적 반대를 정치적 행동으로 몰아갔다. 뉘 논에는 뉘만 보인다”는 뜻의 불안문과 같은 상황”

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이) 심지어 인터뷰에서는 연일 추락 중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고공행진할 거라고 믿는다고 답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다스릴 궁리 하느라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찰제도 개선으로 애써 의미를 축소하지만 본질은 권력기관 장악”이라며 “경찰 내부의 사무분장 정도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법률까지 무시하면서 제대로 된 국민 의견 수렴, 국회 소통 없이 경찰 장악 밀어붙이는 독선적 태

도는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국 신설 등 윤석열의 시행령 통치에 대한 법률적 대응도 본격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뉴스1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도의회, 원구성 후 첫 회기

오늘부터 내달 1일까지 임시회도 추경예산안 등 안건 처리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8일 제12대 도의회 원구성 이후 첫 회기인 제38회 도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청기 집행부 출범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도정 및 교육·학에 행정에 관한 시책 방향을 청취한다.

또한 전라북도가 제출한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안건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국원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제2회 의회 첫 회기인 만큼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실·국·원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꼼꼼하게 들

여다보면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7일부터 3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에서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전북도 제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제출된 만큼 국민의 시각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불합당한 것은 아닌지 세심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8월 1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하게 된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슬로건이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만큼,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힘써달라”면서 “도민을 위한 정책에는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지만,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국가균형발전위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의장단 협의회 대표 포함

민주 김윤덕 의원, 균형발전 일부 개정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전주시갑)이 지난 14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회 대표를 포함 확대하는 ‘국가균형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인구심포자점에서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멸 위험 지역은 115곳이고 23년 뒤에는 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진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그동안 각 부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체 대표자만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의견 청취가 제약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수를 34명 이내에서 36명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지방의회 협의회 대표 2명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 협의회 대표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담길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실종아동 동행자 신상 공개

민주 신영대 의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4일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달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완도 일가족 실종사건’에서 실종아동의 이름과 얼굴은 공개됐지만 보호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아 신속한 수사와 사건 해결을 위해 부모의 얼굴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 접수 시 곧바로 수사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반면 성인의 경우 실종된 상황이라도 범죄



와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얼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번 안도 일가족 실종사건 이후로 법 개정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성인은 실종되더라도 범죄와 연관되지 않고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데, 실종아동들의 취지를 살리고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선 동행 성인의 신상이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동행 성인의 신상 공개가 소재 파악을 통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